

북한경제 연구 발전방향

김병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kimby@snu.ac.kr

통일 준비는 종합예술과 같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역할만으로 그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채우기 어렵다. 그러나 통일 준비의 핵심이 북한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북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북한의 체제 이행과 경제개발, 남북한 경제통합과 관련된 남한의 연구 역량 강화와 전문가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없으면 통일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일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민족적 감상주의, 정치적 선동주의, 엘리트 밀실주의가 판칠 수 있다. 그 결과 부정확하고 단편적이며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실행될 확률이 높아지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비용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다.

불행히도 남한에서의 북한 연구 역량은 높지 않다. 북한 전문가들의 연구 역량이 정치학이나 외교학, 사회학, 경제학의 각 분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살펴보면 이런 진단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의 숫자도 크게 부족하다. 예를 들어 현재 열심히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경제 전문가 수는 20명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나마 정책 연구용역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이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와 같이 북한문제라는 이슈의 중차대함에 비해 연구자의 수나 연구수준의 질은 미약하다. 미국에서는 유명 대학의 경제학과가 소련경제 연구자들을 교수로 임용하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한국의 일반 대학에서 북한경제를 전공한 교수가 있는 대학은 그야말로 소수에 불과하며 필자가 알기로 경제학과에서 체제이행이나 북한경제 전공 교수를 두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 단 한 곳 밖에 없다.

정부는 연구자의 뛰어난 연구 역량을 필요로는 하지만 그 역량을 제대로 조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객관적이며 기초적인 연구를 방해하는 결과를 빚기도 한다. 정부가 부족한 자료나마 연구자와 공유함으로써 연구자와 협력하기보다 연구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비공개, 독점함으로써 좋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는 소련경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CIA가 학계와 연구소의 연구자와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매 5년마다 미국 의회에 보고하는 등 깊이 협력한 사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기관의 자료 독점 성향의 결과, 북한 연구자의 연구성과는 떨어지고 북한 연구자들이 학계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북한 연구 자체가 위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북한경제 연구를 위한 데이터 구축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북한 연구만큼 투자 대비 기대 수익이 큰 분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러나 단기적인 수익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은 북한 연구에 투자할 동기가 약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정부 외에 북한 연구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기관을 찾기 어렵다. 먼저 정부는 북한 연구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구축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 연구가 과학적이며 사실에 입각한 토대 위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구축사업은 1년 단위의 예산이 아니라 장기, 예를 들면 10년 이상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우면 북한경제 데이터 구축사업을 한국연구재단의 장기 과제로 설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와 학자의 연구 협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학자들로부터 단기 정책 제언을 듣는 데 급급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경제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학자들에게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정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 학자들은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공공에 개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공개에 관해 여러 단계를 두어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도록 정부는 단기 정책과제가 아닌 기초연구과제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반드시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북한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치적인 이유, 주관적인 관점과 이념, 개인적 선호에 따라 대북정책이 결정된 경우가 많았다. 이를 사실과 과학에 근거한 정책으로 바꾸지 않으면 대북정책은 실패를 거듭할 것이다. 북한경제에 관한 데이터 구축과 실증적 분석에 탁월한 전문가 육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이유다.